



전산필

contents



대북정책 4년의 성과

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2. 분야별 남북대화의 추진
3.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
 4. 남북교역 증대
 5. 남북 인적왕래 확대
6.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7.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
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9. 경수로건설 본격 추진
10.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Q & A

1.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2.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3. 우리도 어렵는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4.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5.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 국민갈등만 생기지 않았나요?

남북관계 주요 일지



「국민의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평화와 화해협력을 양대 기조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만났고,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국 및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의 증대로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의 기틀을 더욱 튼튼하게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북정책 4년의 성과

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남북정상의 첫 만남

6·15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만나고 대화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부차원의 남북경협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국간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호응함으로써 마침내 2000년 6월 13일~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변화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남과 북이 민족내부에서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으며,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요인이었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제평화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두 정상은 2박 3일간 단독회담 등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요지

-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이러한 남북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에 직접 합의·서명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고 있다는 점,

둘째,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

셋째, 남북이 통일을 미래적 과제로 두고 우선 평화공존단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였다는 점,

넷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당면 과제인 이산가족문제나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실천사항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공동선언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2

분야별 남북대화의 추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 정상간의 합의에 의해 성사된 당국간 회담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화해·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오가며 여섯 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금강산관광당국회담 등 분야별로 다양한 회담을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경의선 및 금강산 육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문제해결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가 재개되고, 이산가족의 상봉 및 생사·주소 확인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간에 막혔던 물꼬들이 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항들 중 향후 남북이 실천해 나가야 할 현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조기 착수 및 빠른 시일 내 개통
-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 남-북-러 철도 연결 협력 및 가스관 연결사업 검토
-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실무접촉 개최
-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대책 협의를 위한 현지조사
-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의 빠른 시일 내 발효
- 동해 공동어로 문제 협의 등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회담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평화를 향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대표적 사례가 군사분야의 남북대화입니다.

2000년 9월 2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 최고 당국자가 마주 앉은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군사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전쟁위험 제거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판문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 내 남북관리구역 설정문제와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문제



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리구역의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타결되었습니다.

남북경제분야 회담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0년에 세 차례, 2001년에 세 차례 등 모두 여섯 차례의 경제분야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협력실무접촉이 두 차례 이루어진 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분야별 회담인 남북전력실무협의회, 남북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경제분야회담에서 이룬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과 제4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이종과세방지, 청산



결제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합의하고 정식 서명하여 현재 발효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 위해 금강산에서 세 차례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3회), 생사·주소 확인(2회) 및 서신교환(1회) 등을 합의·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3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

남북경협 기반 구축 노력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실천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철도와 도로의 연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한 협력을 제의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경의선 철도연결 등 남북간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남북 기반시설의 연결 필요성에 대한 양 정상의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제1,2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공사추진을 위해 국방장관회담에서 공사인원, 물자의 출입 및 안전보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군사실무회담에서 군사보장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발효가 지연됨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 이남 우리측 구간의 공사를 2001년 12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9월 30일부터 경의선 일부 구간인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주중 매일 5회, 주말 및 공휴일 매일 9회 왕복운행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설을 계기로 망배열차 운행 등 복원구간을 지역 교통 및 안보관광 루트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은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 철도가 중국 횡단철도(TCR)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 중국 및 시베리아의 시장과 자원개발 활용이 용이해지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은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 홍수 등 재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한 치수사업입니다.

이는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남북이 함께 잘사는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 및 실무협의회에서는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측은 공동조사 등의 조속한 실시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진강뿐만 아니라 북한강 유역을 포함한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수자원 협력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개성공단 개발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 아·태간에 개성공단 조성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현대와 한국토지공사는 공단 후보지로서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단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된 제품이 생산되어 우리 중소기업, 특히 신발·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단이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인접해 있고 개성시



를 배후도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측이 임금·고용·토지임대·세제·송금 등과 관련한 법제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였으며, 현재 발효절차만이 남아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투자보장의 경우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송금·출입·체류 등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산결제의 경우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을 규정하고 청산결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인 일반결제방식을 적용기로 하였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의 경우 사업소득, 이자·배당·로열티 등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여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도 명시하였습니다.

상사분쟁 해결의 경우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4개 경제협약의 조속한 발효와 후속 조치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통행·통신, 원산지 증명, 산업표준화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

남북교역 증대

교역규모의 지속적 확대

남북교역은 1989년 약 1,870만불 규모로 시작되어 1991년 1억불, 1995년 2억불, 1997년에 3억불 규모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경제 침체로 1998년에 2억불대로 떨어졌으나, 1999년에 다시 3억불대로 규모를 회복하였고, 2000년에는 4억 2,500만불로 남북교역 사상 가장 높은 교역량을 기록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으나 4억불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남북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띠게 되고,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수와 교역품목도 증가하여, 교역업체의 경우 1989년에 30개 업체에서 2000년 652개 업체로, 교역품목의 경우 1989년 26개 품목에서 2000년 646개 품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교역업체와 교역품목변화 추이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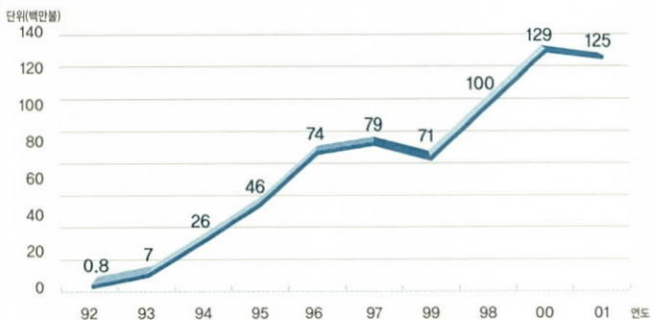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 2천만불 수준을 넘어섰으며, 2000년부터 1억불을 초과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탁가공 교역업체도 1992년 4개 업체에서 2001년에는 125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품목도 농산물·섬유·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컬러TV,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터



기판,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 추이



5

남북 인적왕래 확대

남북한 왕래 규모의 증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원칙' 하에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간 왕래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체육·학술·문화·언론·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대규모 행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 북한방문

1998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총 24,747명으로, 이는 1989년 남북교류가 시작된 이래 1997년까지 9년간의 방북인원 2,405명의 10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후 2001년 12월 말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국민도 428,0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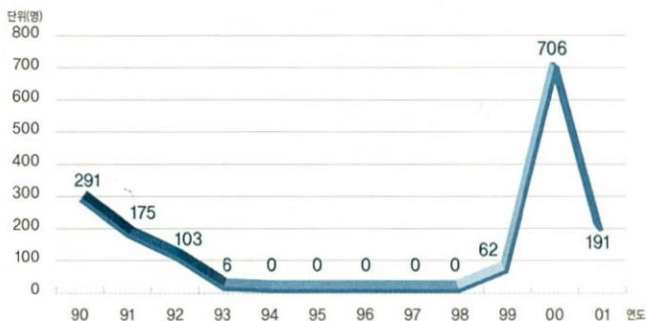
■ 남한방문

남한방문의 추세를 보면 1990년에는 291명,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남한방문이 없다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999년 62명, 2000년 706명으로 현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에도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교환, 정주영 전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이루어졌으나,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이 지속되면서 19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연도별 남한방문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실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각종 교류가 평양과 서울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큼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는 1998년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윤이상통일음악회』, 1999년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민족통일음악회』 등의 방북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에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이, 2001년에는 『춘향전』, 『민족웃전시회』, 『남북공동사진전』 등이 성사되었습니다.

체육분야에서도 2001년 『금강산국제자동차경주대회』, 『금강산모터사이클투어링』이 성사되었습니다.



언론분야에서의 교류도 2000년 우리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별언론사의 방북 취재와 방송물 제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페르손 스웨덴 총리 방북, 남북농민대회, 8·15 남북공동행사 등에 우리 언론인이 동행하여 취재활동을 하였습니다.

종교분야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남북종교인 평화모임, 안중근 의사 기념행사 등 다양한 종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통일관련 사회유관단체 및 노동·농민 단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8·15 광복절 등을 계기로 남북공동행사를 금강산지역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이산가족교류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 징표로서, 정부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세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총 3,600여명의 가족들이 상봉하였으며, 방문단 교환과 두 차례의 생사·주소확인 등을 통해 총 10,902명이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하였고, 총 662명이 편지를 교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을 연장하고 북한방문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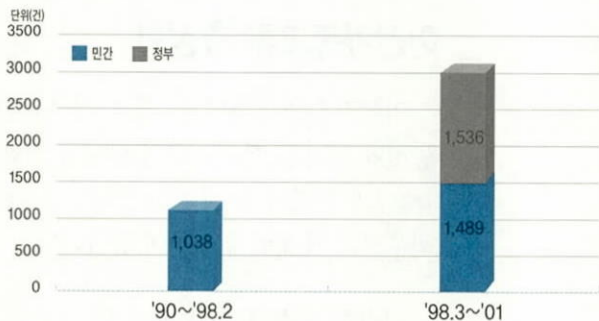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류경비도 19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920건에 대해 총 8억 5,8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말까지 정부 및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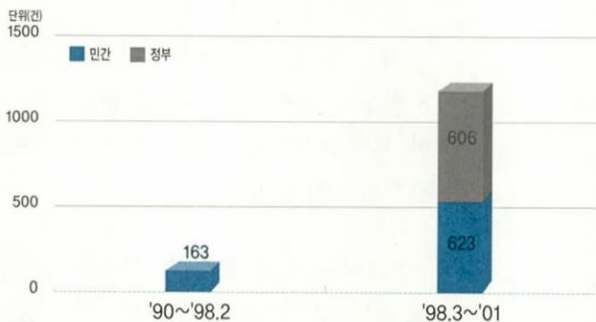
차원의 교류는 생사확인 3,025건, 상봉 1,229건 등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정부 및 민간차원 생사확인 건수



*'90~'98.2까지 정부차원의 생사확인 건수 없음

■ 정부 및 민간차원 상봉 건수



*'90~'98.2까지 정부차원의 상봉 건수 없음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정부는 1998년부터 이산가족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고, 1999년부터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는 2001년말 현재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11만명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어, 생사확인,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체계를 새로 정비하여, 사용자가 직접 편지사연을 소개하고 등록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이산가족찾기를 시행하는 서비스(Internal Matching)를 대한적십자사의 심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평화유지 노력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함으로써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대북지원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북한사회 내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우리의 부담능력과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대북지원 총액은 1억 8,833만불로 국제사회 지원액의 17% 수준입니다.



정부는 대북 직접지원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업에도 일정부분 참여하여 2001년에는 옥수수 10만톤(WFP), 말라리아 방역 사업(WHO)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지원과 상호 보완적 구도를 이루면서 지원분야도 농업·의료보건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긴급구호에서 점차 지속적인 협력사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농업분야 : 종자개량, 축산, 채소재배, 농자재 지원 등
- 보건의료분야 : 결핵퇴치, 병원 현대화, 의약품 지원 등
- 환경분야 : 삼림복구, 삼림공동방제 등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1억 3,955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북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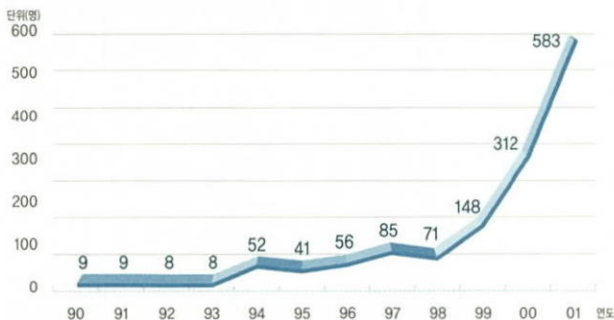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능력 제고

정부는 최근 3년간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중앙-지방, 정부-민간을 포함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내실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은 1999년 개원 이래 우리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총 740명이 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하나원」교육 후 초기 사회정착 단계에서 기초적인 생계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착금, 주거지원, 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 지원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취업확대를 위해 지방 노동사무소에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공공·시설훈련기관에서 거주지보호기간(5년)내 본인의 희망직종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정보처리·중장비·요리 등 42개 직종에 454명이 직업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월 최고 70만원까지 2년간 지급하는 취업보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1년 말까지 258개 사업체에 267명이 취업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반 마련 및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하나원」은 100명에서 250명 수용 규모로 증축을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증가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민간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및 위로행사, 민간단체 후원사업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간 네트워크(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을 구성하여 결연, 학습, 문화탐방,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후원단체, 고용사업체 등을 망라하는 지역협의회(10개 지역)를 구성하여 사회적 지원연계망의 구축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로건설 본격 추진

경수로사업의 안정적 추진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한국,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 지구에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1,000MWe급 2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초기에는 남북한 근로자가 상호 문화적 차이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경수로사업은 1997년 8월 부지정지공사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2월 주계약(Turn-key Contract) 발효와 더불어 본 공사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2001년 8월말에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9월에 본 공사 최초 주요 핵심공정인 발전소 본관 기초굴착 공사를 착공하는 등 경수로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로서 부지인근 진입



도로 27km를 개설 포장하였고, 취수방과제 및 물양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16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임시 동력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건설사무소 등의 공사기반시설도 마련하였습니다.

경수로 건설공사에는 2001년 12월말 현재 KEDO 인력 6명, 남측 625명, 북측 96명, 우즈벡 인력 426명 등 총 1,151명의 근로자가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 운행을 증편하여 월 4회 정기적으로 인력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남북직항로 개설, 독자위성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하여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로 사업의 재원 분담

1998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건설 예상사업비를 총 46억불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응하여 실제 사업비의 70%인 32.2억불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총 7억 4,536만불의 건설공사비가 주계약자인 한전에 지급되었으며 이중 우리나라가 5억 2,175만불의 건설공사비를 분담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 2,361만불은 일본이 분담하였으며, 한편



미국은 매년 50만톤의 중유 조달을 위해 2001년 말까지 3억 500만불을 부담하였습니다.

경수로발전소는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수로 완공 후 3년 거치 17년간 북한이 KEDO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경수로사업비는 한국전력 및 국내 협력업체들을 통해 근로자 인건비와 설계비 및 자재비 등으로 국내경제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국내 고용창출과 내수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10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북화해협력정책 3원칙의 제1원칙이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점과 1999년 연평해전에서 입증된 확고한 안보태세는 무엇보다 평화를 지키겠다(peace keeping)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한미군사동맹과 우리의 자주적 국방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안보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북한주민의 대남적대감을 해소하여 안보의 근원적 위협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 즉 평화를 만드는 노력(peace making)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의 대남 비난방송이 중단되고,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은 각 부문에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의 「페리보고서」는 우리의 대북화해 협력정책에 바탕한 한미일 3국의 한반도 평화 조성노력의 결과였으며, 부시 행정부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



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시작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폐쇄적 입장을 취해온 북한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17개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한반도 평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남과 북,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모두 노력한 결과가 있었기에 지난 해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도 한반도는 안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경의선 연결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군사부문에 서의 신뢰구축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 & A

-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 국민갈등만 생기지 않았나요?



Q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A 현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이는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는 무관심정책(benign neglect policy)으로, 이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며, 현 상황에서 유일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연평해전시의 금강산 관광선 정상 운항과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해 미국의 테러사건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조성 등 경제회복 및 국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대북화해협력정책은 금년도 우리나라의 국운이 걸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등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최근 야당 총재도 미국 방문 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지속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 대북화해협력정책 이후 북한은 변하고 있나요?

A 북한은 1990년 이후 연이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외화난, 이탈주민 증가 등 체제이완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경제분야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외화 획득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공식배급체계 대신 농민시장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집단적 생산보다도 사적 경제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고 수익 추구 등 시장경제적 가치관이 움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서방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과 대외개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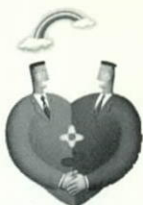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경제, 금융, 무역, 회계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배우기 위해 2001년 한 해 동안 500여명의 북한 학자 및 경제관리들이 미국, 유럽 등지에서 파견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테러전쟁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동안 보여 온 변화 조짐은 북한체제의 오랜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변화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변화가 축적되어 장차 북한의 정치·군사분야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Q 우리도 어려운데 북한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나요?

A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에 너무 '퍼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우려입니다.

1998년 이래 2001년 말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총 지원액은 1억 8,833만 달러(2,350억원)로 국민 1인당 연평균 대북지원액은 2,400원 수준입니다.

* 2000년 대북지원 총액(1.1억 달러) / 국민총소득(4,552억 달러) = 약 0.024%

또한 미국과 일본도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대북지원을 해왔습니다.

* 현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1.9억불, 미국은 같은 기간동안 4.8억불, 일본은 2억불 상당을 지원했음.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을 돕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평화유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01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액(913억원) / 2001년 국방예산(15조 3,884억원) = 약 0.59%



이러한 평화비용은 대외적 경제 신인도를 개선시켜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또한 북한 경제회생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결핍과 발육 부진 상태를 방지할 경우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Q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A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으로 긴장 완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3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을 관광하였고, 그곳에서 다양한 남북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남북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연평해전 및 지난해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유지, 외국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등 우리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주체의 자금사정 악화, 관광객 감소 및 북측의 관광활성화조치 지연 등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관광지속에 대해 우리 국민의 다수가 찬성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동안 추진해 온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개설 등이 무위로 돌아가고, 관광재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우리의 대외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과 긴장완화 등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 일단 관광사업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갖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 이산가족·학생 등의 관광경비 지원
-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조건 완화
- 금강산 지역에 외국상품 판매소 설치 허용

이러한 조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며, 그 혜택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토대 위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육로관광 등 관광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인해 국민갈등만 생기지 않았나요?

A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혹은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국민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내부에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고, 남북관계의 이중성 때문에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의 변화를 재는 잣대가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들은 과거 '대결과 반목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편,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우리 사회 내 진보와 보수 계층이 북한에 대한 현실적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이념적 논쟁이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보가 늘어났고, 통일문제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개인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됨으로써 생겨난 결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정서와 보편적 판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협상과 관련하여 정보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책추진의 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주요 일지

1998~2001

1998년

-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대북정책 추진 3대 원칙
 -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 ② 흡수 통일 배제
 -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 ▶ 3.25~27 대북 구호물자 제공관련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북경)

- ▶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북경)

- ▶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시행
 - 대기업·경제단체의 수시방북제도 확대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 투자업종·규모제한의 완화

- ▶ 6.16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판문점 경유)

- ▶ 8.1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 ▶ 9.2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개소(이북5도위)

- ▶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999년

- ▶ 1.4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일 안보관련 3대 방침 결정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② 남북 화해·협력 지속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 ▶ 5.5 김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 제시 ①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② 남북간 화해·협력 ③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⑤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 ▶ 6.15 북측과 우리측 해군 서해상에서 교전 사태(연평해전) 발생
- ▶ 6.22~26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북경)
- 남: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박영수 내각 참사
- ▶ 7.1~3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북경)
- 남: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박영수 내각 참사
- ▶ 7. 8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 개원
- ▶ 8. 23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 9.15 미 페리 조 장관, 의회에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보고
- ▶ 9.17 미 클린턴 대통령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 ▶ 12.15 KEDO, 한전과 경수로 주계약 체결
- 한전은 1백만 Kw급 한국형 경수로 2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제공
- ▶ 12.20 「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 12.23~24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서울)

2000년

- ▶ 1. 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③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북한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 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 촉구
- ▶ 3. 17~4. 8 남북 특사접촉(중국 상해, 북경)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남)
-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북)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 6. 13~15 남북정상회담 개최(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 6. 27~30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박재규 통일부 장관(남)
-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북)
- ▶ 8. 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 ▶ 8. 14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 8. 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 8.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합동공연
- ▶ 8.29~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 ▶ 9.20~23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 (금강산)
- ▶ 9.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 ▶ 9.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 ▶ 10.9~12 북한 조명록 특사, 방미
- 미·북 공동선언 발표(10.12)
- ▶ 10.20 아셈(ASEM)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서울)
- ▶ 10.23~2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 ▶ 11.8~11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평양)
-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
-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경의선·도로연결공사 협의
- ▶ 11.30~12.2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 12.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 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 12.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평양)

2001년

- ▶ 1.15~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 1.29~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남측 대표: 이병웅(수석대표), 고경빈, 최기성
 - 북측 대표: 김경락 단장, 리금철, 리호림
- ▶ 1.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 2. 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에 따른 군사적 보장 합의서 타결
- ▶ 2. 8~10 제1차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회의(평양)
- ▶ 2.21~24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회의(평양)
- ▶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 2.27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 한-러 정상회담 개최
- ▶ 3.6~11 김대중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 ▶ 3.15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 남북 각 300명, 600건
- ▶ 5.3 페르손 EU 의장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 6.6 부시 미 대통령,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 발표
 - ① 핵관련 기본합의 이행의 개선
 - ② 미사일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및 미사일 수출 금지
 - ③ 재래식 군사력 태세 검토
- ▶ 7.26~8.18 김정일, 러시아 방문
- ▶ 9.3~5 장쩌민 중국주석, 북한 방문
- ▶ 9.15~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 홍순영 통일부 장관(남), 김령성 내각 참사(북)
- ▶ 10.3~5 금강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금강산)
- ▶ 10.3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
- ▶ 10.9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명단 교환
- ▶ 11. 9~14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금강산)
- 홍순영 통일부 장관(남), 김령성 내각 참사(북)

